‘교육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도의회 교육위, 교육의원 끝내 불참 조례안 의결 무산

조직개편·학교 통폐합 등 차질…학습권 피해 불 보 듯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들의 불참으로 끝내 교육 현안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같은 교육의원들의 행태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면서 자리에만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교육위원 9명 중 교육의원 5명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교육의원들은 “현재 특정 정당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한 8개 시·도 교육의원들과 상임위 불참 등 공동보조를 해나가겠다”며 상임위 활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27일 폐회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학교 통폐합 무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교육위원회 임흥빈(민주·신안 1) 위원장과 권 욱(민주·목포 2) 간사, 박병학 교육의원 등이 만나 조례안 처리를 위한 교육위 정상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 위원장 등은 “(교육의원들이) 독식이라고 하니 간사직 내놓을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의원들과 연대문제가 있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커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교육 조례안의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조례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복식수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9월1일 자로 병설유치원 1곳과 초등 분교장 6곳을 폐지하고, 초등 4곳과 중학교 1곳을 분교장으로 개편하려고 했던 학교 통폐합은 차질이 불가피해져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도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기구 설치와 교육감 권한의 교육장 위임도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권 욱 간사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학교 통폐합 조례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달 20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6일 동해에서 대규모 해상 한미 연합훈련이 이틀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 위로 최신예 F-22 랩터(왼쪽 두번째, 세번째)가 함재기들과 편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이더 피해 北 전역 1시간내 타격”

美 공군, 스텔스 정밀 타격 전투기 F-22 첫 공개

“F-22 전투기의 연합훈련 참가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며 강력한 대북억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A. 레밍턴 미 7공군사령관은 26일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최신예 전투기 F-22(랩터)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면서 F-22의 훈련 참가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F-22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1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F-22는 ‘APG-77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250㎞ 떨어진 곳에 있는 직경 1m 물체를 식별해 위치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미니 조기경보기(AWACS)라고도 불린다. 각종 폭탄과 미사일은 기체 레이더 탐지 확률을 줄이도록 모두 기체 속에 내장되어 있었다.

M61A2 20mm 포 1문이 장착되어 있으며 좌우측 무장격실에 AIM-9(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각각 1기씩, 중앙무장실에는 AIM-120 암람 미사일 6기 또는 2기의 450㎏급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레밍턴 사령관은 “F-22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격퇴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F-22의 전자전 능력은 항공모함에 탑재된 EA-6B 전자전기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체 표면의 레이더 반사면적이 불과 0.0001㎡에 불과해 적의 레이더에 들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도 뛰어나다.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꼽힌다.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시 순항속도가 마하 1.6에 이르며 항속거리 3천여㎞, 작전반경은 700㎞에 이른다. 태평양 전 지역으로 언제든 전개가 가능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연합뉴스

사용량 는 데다 서민경제 감안

광주도시가스요금 이례적 인하 왜

광주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도시가스 인하 방안을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물가 인상의 주요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하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 도시가스요금을 루베(m³) 당 ▲3.84원 인상▲3.2원 인하 ▲동결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들 안을 검토한 뒤 루베 당 3.2원을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애초 올해 도시가스 공급물량을 4억7000만 루베로 예상하고 공급가격을 루베 당 91.69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사용량이 4억9950만 루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다음달 1일부터 루베 당 88.49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올해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겨울이 유난히 길어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열병합방식으로 광산구 수완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수완에너지가 상반기 전기생산에 들어가면서 올해 무려 5500만 루베의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 것도 한몫을 했다.

정부로부터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요금은 광주지역 공급을 맡고 있는 해양도시가스가 원가에 인건비, 영업비용, 시설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추가시설설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결이나 인상안이 검토됐지만, 물가대책위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 가스요금 인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인하 대상은 일반도시가스로, 시내버스나 택시 등 수송용 도시가스는 동결됐다. 또 냉방용 도시가스를 제외하면 실제 가정용 도시가스는 루베 당 2.77원이 내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취사용 도시가스의 소비자요금은 기존 루베 당 712.66원에서 734.62원으로 21.96원이 오르고, 난방용은 기존 770.46원에서 761.80원으로 8.66원이 인하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보호감호제’ 재도입…형량, 판사 재량 축소

법무부 법 개정 시안 제출, ‘낙태허용’ 등은 포함 안돼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25일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내에 입법 절차를 밟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시안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작량감경 조항의 수정 등 형법 총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간통제 폐지 여부 ▲낙태의 제한적 허용 ▲강간 대상 확대 등의 각론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호감호제는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조항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살인, 방화, 강간 등의 흉악 범죄자에 한해 재도입될 전망이다.

개정시안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서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을 7년 이내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께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순조롭게 통과되면 보호감호제는 2005년 폐지 이후 6년만에 다시 시행된다.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시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초범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압박·협박에 못이겨 범행한 경우 ▲범행 후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때 등의 요건에 엄격하게 들어맞을 때만 작량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다문화 가정에 넓은 마음 갖자” 李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국 남성의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과 관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부의 고국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44차 라디오 연설에서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며 특히 “우리 모두가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